도, 보육정책 시행계획 확정…양육 · 보육 부담 최소화

만0~1세 아동 부모급여 지급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어린이집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 부모 부담 경감 효과

부모의 양육·보육비용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2023년 전라북도 보육정책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2월 개최된 전라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3년 전라북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도비 3,6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시행계획은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수 감소와 이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 증가 등의 보육환경을 분석하고, 전북도의 2023년 보육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도는 '보육 부담 완화 및 질 좋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37개의 시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전북 보육 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생애 초기 충분한 돌봄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양육 선택권 강화다.

출산 후 1~2년간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외 발생하는 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 등 필요경비도 월 10만 원 지원한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도 전액 지원돼 부모 부담이 더욱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악화로 인해 폐원이 늘고 있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10개소를 확충해 공보육 이용률(2022년 36.1%)을 38.2%로 향상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및 컨설팅으로 안정적인 공보육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월 10만원)를 지원한다.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는 교사 겸직 원장 수당,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근무 담임교사에게 특별수당, 어린이집 채용 및 대체 교사 지원을 지속 확대해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더불어 전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양육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역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 어린이집 컨설팅, 영유아 성장 발달 시기별 최적의 양육정보 공유,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육아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 등 양육·보육 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기선 전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아이가 귀한 시대에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부담은 덜고, 내실 있는 보육 서비스가 되도록 2023년 영유아 보육사업 시행계획의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환경부 관계자를 만나 도정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전북도, 환경분야 현안 대응 '총력'

남원 광역소각시설 조성 ·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건의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8일 이영기 기획조정실장 등 환경부 관계자를 만나 도정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조 부지사는 "국민의 환경기본권 충족을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남원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들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서 회복탄력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내 훼손 지역에 대한 생태계 회복이 시급함을 설명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야 특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전라북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새롭고 특별한 전북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부처 단계부터 국가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청소년정책 담당자 모여…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공유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과 청소년 보호·활동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2023년도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지자체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지자체 의견조회를 마쳤으나 아직 기본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을 다루는 민·관 관계자들의 업무연찬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청소년 수는 급감하나 위기청소년은 증가 추세고 최근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등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과 정책환경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의제를 달리한 회의는 1, 2부로 나눠 진행했다. 1부에서는 △2023년 전라북도 청소년정책 현황, △도 자체 청소년 주요사업, △정부 합동평가 등 도-시·군 협력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활동진흥센터의 협조·요청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회의를 주관한 전북도 청소년팀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전라북도 청소년정책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중앙 및 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절차 준수 등을 당부했다. 또 코로나 대유행 이후 재개되는 사업 등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의 탄탄한 기본계획 수립과 꼼꼼한 관리, 사후관리 등 담당 공무원에 세심한 업무관리를 주문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과 청소년 보호·활동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2023년도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 주요 정책사업 설명
정책 실효성 제고 위한 도-시군-관계기관, 협력강화 방안 논의

2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김진호 교수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도와 14개 시군의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은 129명으로 1인당 2,200여 명을 담당하고, 청소년 관련 법인 및 청소년 쉼터 등 관계시설·단체는 172개소에 이른다. 2023년 전라북도 청소년 보호·활동사업에는 국비 보조사업 20개, 도 자체사업 15개 등 35개 사업에 총 224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도와 시군 및 관계기관들의 역량 결집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은 개발하고, 또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청소년 인구는 지난해 기준 28만2,123명으로 도내 인구의 16%를 차지, 2012년 20.3%에서 2017년 18.3%로 감소 추세다.

도와 14개 시군의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은 129명으로 1인당 2,200여 명을 담당하고, 청소년 관련 법인 및 청소년 쉼터 등 관계시설·단체는 172개소에 이른다. 2023년 전라북도 청소년 보호·활동사업에는 국비 보조사업 20개, 도 자체사업 15개 등 35개 사업에 총 224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식중독 대응 협의체 회의

협업체계 강화 국제행사 시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식중독 예방과 식중독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식중독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전라북도교육청, 14개 시·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대한영양사회 전북지회, 한국조리사협회 전북지회 등 21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기관별 2023년 식중독 발생 저감화 추진계획, 식중독 주요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 관리 강화 방안, 위생취약 급식시설 관리 방안 등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에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와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개최되는 해로, 전북도는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기간 이전에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 원인 식품과 원인균 등을 신속하게 규명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55% 지원

이달 말일까지 신청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보조금 신청서를 농·축산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농·축산인 및 농업법인이다. 2021년도 평균 면세유가 대비 2022년 1월~9월까지 평균 면세유가 상승분의 55%를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구매한 면세유 중 4개월분이다.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최대 6개월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유종은 총 8종이다. 리터당 지원 단가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 난방 171원, LPG 차량 91원, 부생원료유 1호 207원, 부생원료유 2호 97원이다.

다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의 시설원예 유가보조금 3개월분을 지원받은 농가는 별도 단가를 적용한다. 보조금 지급은 4월부터 6월말까지로 시·군별로 진행되며, 농·축산인이 지정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김재훈기자

전북도,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운영자간 상생발전 논의

충전소 예약제 도입 검토 · 수소 충전소 확충 등… 수소차 운행 등 수소 도시 발전 견인

전북도는 지난달 27일 도내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운영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전 시간이 5분으로 전기차에 비해 빠르고, 한번 충전으로 약 600km를 주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유해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물과 수증기가 배출되는 무공해차이다.

그동안 도는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도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무공해 수소차를 2019년부터 보급해 왔다. 수소차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이용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수소차 이용자는 1,947명이다.

간담회에서 수소차 운전자는 도내 충전소가 전주 3곳, 완주 1곳, 군산 1곳, 익산 1곳 등 9곳이 있으나, 여전히 충전소 부족으로 충전 대기시간 증가, 수소 재료 소진 발생 등 애로사항이 있어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를 제안했다.

충전소 운영은 충전소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는 수요 증가, 수소 수급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로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충전소 운영자들의 입장이었다. 다만 일부 충전소는 총 운영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시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예측 가능한 충전을 통해 수소차 운전자 대기시간 감축과 수소 재고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산지곡 충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약제' 도입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며, 충전소 운영자들도 지역 여건, 이용자 등을 고려해 예약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는 수소충전소의 충전상황 정보가 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해 공유됐으나, 앞으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 중인 '수소유통정보시스템(하잉)'을 통해 운영사의 실시간 충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와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전소 보수, 공사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백업충전소를 지정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애로사항이 있어도 허심탄회하게 말할 기회가 없어 답답한 마음이었으나,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운영자간 서로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반응이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간담회가 의견 공유 및 상생발전의 계기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수소차 운행하기 좋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도내 어디서나 충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수소차 운행 확대 등 수소 도시로서 발전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설공사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던 전주송천 수소충전소는 3월 초 운영 재개 예정이다. 전국 최대규모의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지난달 25일부터 승용차를 대상으로 일부 시간대 충전 예약을 받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평가 '최우수'

전북도는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단독으로 시행된 첫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해, 지자체 73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중 전북도와 경기 수원시, 강원 양구군, 대전 서구 4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에서는 전북도가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뽑혔으며, 전북도내 7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부안)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및 제도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및 우수사례 등을 종합 심사했다.

전북도는 도내 기업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 주민체감형 우수사례인 '화재로 인한 아픔, 119안심하우스 지원으로 포옹하다'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다양한 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추진방안 협의 시작

송변전 설비 조속 착공 다짐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SKE&S 등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기관이 모여 사업추진방안 협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송변전설비 비용 선투입을 독려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초 다수의 참여기관 간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참여기관장과 실무진과의 만남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의 사업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비용분담 협의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이날 한수원이 검토한 송변전설비 등 공용시설 비용분담(안)에 대해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고, 송변전설비 착공을 위한 선결과제를 도출과 참여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기로 했다.

매달 2·3회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비용분담 방안 협의를 결정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송변전설비를 조속히 착공하기로 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추진방안 협의 시작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참여기관과의 긴밀한 협상과 협력을 통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